

당정 “중위소득 100% 이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개정안 단독 처리 野에 ‘타협안’ 4인 가구 월소득 540만원 ↓ 대상 민주 기준안 1080만원의 중간치 서동용 “구체 계획 제시를” 비판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대학생에 한해,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야당에 법안 수정 논의를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등이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학자금 무이자대출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한 ‘타협안’ 성격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취약계층 학자금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당정 안에 따르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540만원 이하(중위소득 100%) 대학생은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받게 된다.

민주당에서 기준으로 정한 학자금 지원 8구간(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080만원 이하)의 중간치로 지원 대상을 정했는데, 서민이나 중산층을 대표하면서 재정 여력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당정은 민주당 안을 반대하는 이유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호주 정책위원회 청년부위원장, 이태규 국민의힘 정책위 부위원장 겸 교육위원회 간사, 이만희 정책위수석부의장, 박 정책위의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김정연 교육부 정책기획관. **뉴스**

향후 10년 간 8650억원 규모의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된다는 점, 고졸자는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서민, 소상공인 대출과의 형평성 논란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소득 8구간까지 모든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면 연간 860억원 규모의 국민 세금이 들어가지만,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데 당정은 공감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아울러 저소득층의 학자금 부담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저리 생활비 대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초 차상위 가구 모든 자녀를 대상으로 등록금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한다.

중간계층에 대해서는 지원 한도를 인상하고, 저소득층은 지원 규모를 늘려 국립

대 등록금 수준으로 지원한다.

특히 근로장학금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에 따라 올해 내생안정대책에서 인상했던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를 추가로 인상한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김기현 대표가 주재하는 대학생 간담회에서 논의한 뒤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당은 이날 논의된 지원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

는 한편, 필요한 입법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한다는 제도 취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대출 의원은 ‘이자 면제 차등 적용’ 방안을 담은 새 법안을 내거나 기존 법안을 재논의할지에 대해 “두 방안 모두 가능하다”며 “실질적으로 교육위에서 처리된 부분이 있어서 여야 간 협의로 풀려갈 문제”라고 말했다.

당정은 민주당 법안에 담긴 실업·폐업·육아휴직 등의 경우에는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를 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동용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 “오늘 발표한 내용 중 상당수를 재정 당국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야당의 정책을 비판하려면 최소한 구체적인 계획과 집행 계획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더 이상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제시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윤 대통령, 19~24일 프랑스·베트남 방문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 지원

윤석열(사진) 대통령은 오는 19~24일 프랑스와 베트남을 차례로 방문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지원하고 한·프랑스,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갖는다.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순방 일정을 발표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 부부는 4박6일 일정으로 프랑스와 베트남을 차례로 방문한다”며 “프랑스 방문은 20~21일 파리에서 개최되는 172차 BIE 총회 참석이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총회 1일 차인 20일에는 2030 등록박람회 경쟁국 프레젠테이션((PT) 행사에 참석하고, 21일에는 우리가 주최하는 2030세계박람회 공식 리셉션에 참석해 각국 대표단과 외교단을 대상으로 유치 활동을 펼친다.

윤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에 맞춰 20일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오찬을 겸한 한-프랑스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동포 간담회, 한-프 미래혁신세대 대담, 디지털비전포럼, 유럽지역 기업투자신도시 등 다양한 일정도 소화한다.

김 차장은 “한-프랑스 정상회담을 끝으로 윤 대통령은 최근 2개월 내 G7(주요 7개국)과 EU(유럽연합) 정상 모두와의 만남이 일단락 짓게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2일 베트남으로 이동해 24일까지 국민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23일 보 반 트영 국가주석과 공식 환영식, 한-베트남 정상회담 등 공식 국민 일정을 소화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응우옌 푸 쫑 당 서기장, 팜 밍 쩡 총리, 브영 딩 후에 국회의장 등 베트남의 최고지도부 전원과 개별적 면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은 베트남 방문기간 중 동포 간담회, 한국어 교육기관 방문, 문화행사 참관, 그리고 비즈니스포럼 참석, 현지 산업시설 방문 등의 일정에 갖는다.

서울=김선욱 기자

서삼석 “농번기 외국인 노동자 단속 강화 중단해야”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사진)은 13일 “농번기 농촌지역 인력 수급에 큰 지장을 주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단속 강화를 중단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유연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날 농번기 외국인 노동자 단속 강화와 관련, 보도자료를 내 “농번기 농민과 외국인 노동자의 무차별적 단속은 명분도 실익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농번기 이후로 외국인 불법 체류자 단속 시기를 조정하고, 대책 없는 단속보다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



실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국민 건강과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해 농사를 열심히 짓기만 한 농민들은 지금 생산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국가가 농촌과 농업, 농민의 현실을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농촌·농업 인력의 80~90%가 외국인 노동자로 추정되는데, 이 중 상당수가 ‘불법 체류자’로 분류된다.

서울=김선욱 기자

민주, 한덕수 “日 오염수 마실수 있다” 발언 맹공

“국민 불안감 공감 못하는 모습”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맹비난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총리는 오염수를 마실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음용기준이라는 조건을 달긴 했지만 국민의 불안감을 공감하는 모습은 아니었고,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인식

도 아니었다”며 “국민은 뭘 몰라서 불안해하는 것이니 내 말을 믿어라고 강변하는 모습이었다”고 비판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 의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강행을 앞둔 일본의 총리가 방사능 오염수를 마셔도 된다고 한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일본의 총리보다 용감하며 과학적 확신에 찬 대한민국 총리를 보는 국민들은 어떤 심정일까”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여당은 국민의 합리적 의심에 대해 ‘오해다, 괴담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셔도 된다고 하는 총리 답변이 바로 괴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를 마셔도 된다고 생각하나. 안전 검증이 되면 마시겠나”라고 질의하자 “완전히 과학적으로 처리가 된 거라면, WHO(세계보건기구) 음용수 기준인(삼중수소) 1만 베크렐(Bq/리터 이하) 기준에 맞다면 저는 마시겠다”고 답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尹 정부 ‘지방분권형 국가경영 시스템’ 연구 용역 착수

국가균형발전위 보고서

윤석열 정부의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 연구가 본격화된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과 다양성에 기반한 지역 발전 및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제도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김병준 전경련 회장 등 지방 자치분권 민간 전문가 10여명이 참석하며, 관련 연구 용역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주관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등이 공동 수행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 양극화와 저출생, 고령화, 수도권 쏠림으로 인해 지방소멸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는 상태다.

기존 중앙정부 중심의 규제적·일률적인 정책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른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연구용역은 중앙정부 권한·사무·자원 등을 획기적으로 지방에 넘겨 중앙과 지방 간 역할을 재정립하고, 자치

입법·행정·재정·계획 등 분야별 지방분권 방안을 제시한다.

연구용역 내용 가운데 국민적 관심이 있거나 이슈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선,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관련 학회 등과 정책토론회를 여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연구용역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 현장간담회, 공청회 등에서 나온 다양한 정책 대안들을 지방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아우르는 지방시대 정책의 중기 계획인 지방시대 종합 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민주, 21일부터 격주로 정책 의총 연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1일부터 격주로 정책 의총회를 열기로 했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주요 정책과 관련한 당내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른 결정이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13일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정책의총에서 원내지도부가 향후 어떤 방식으로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끌어갈지 간략하게 의견을 구하고, 향후 정책의총의 운영 방안에 대해

서도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진행할 의총의 모습대로 세부적인 정책에 대해 사전에 의원들의 의견을 구해 논의의 안건을 정하고, 관련 자료도 미리 전달을 한 이후에 의총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김선욱 기자**